

##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과정 및 운영방안

송 두 범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dbsong@cni.re.kr](mailto:dbsong@cni.re.kr)

이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주요내용, 국내외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사례분석,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및 활용방안, 민주시민교육의 운영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검토함으로써 충남민주시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CONTENTS

1. 연구개요
2.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주요내용
3. 국내외 민주시민교육과정
4. 민주시민교육강사양성 및 활용방안
5. 민주시민교육의 운영방안
6. 결론 및 정책제언

### 요약

- 이 연구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국내외 민주시민교육과정의 운영사례,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및 활용방안, 민주시민교육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여 충청남도의 민주시민교육의 실행방안을 모색하였음.
-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의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이며, 어떻게 교수-학습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함.
  - 둘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최소희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형식,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함.
  - 셋째, 민주시민교육 추진근거를 위한 (가칭)충남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함.
  - 넷째, 민주시민교육의 주체로 조례제정이전에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하고 활용함.
  - 다섯째, 민주시민교육 전달체계는 광역의 임무를 명확히하여 정립하고 국가 및 충남평생학습전달체계를 준용함.
  - 여섯째, 자발적인 민주시민교육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민 스스로 운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일곱째, 도민의 민주성 함양을 위한 유능한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활용함.
  - 여덟째, 민주시민교육 실천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함
  - 아홉째, 충남시민대학 체제를 구축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학습함



# 01 연구개요

## 1. 연구배경

-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화의 진전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제도화를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민주화의 진전으로 민주주의, 소비자, 환경문제, 경제교육 등을 관심 증대
  -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차원의 논의는 미흡함
  - 2018년 5월 현재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가 국회 소관상임위에 계류중
- 지방차원에서 보면,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이 시도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는 조례제정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하고 있음.
  - 서울시 및 경기도를 중심으로 광역교육청과 기초교육지원청에서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등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선거, 통일, 인권, 법 교육 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평생교육원이나 민간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함.
  - 선거관리위원회, 통일교육원,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처 등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한 영역을 차지하는 교육을 추진.
  - 자치단체보다는 평생교육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경기도), 민간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서울시)을 총괄하는 경향이 있음.

- 국가중심 민주주의 교육이 아니라, 국민중심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명시하고 있음.
  - 민주시민교육 및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정치참여를 도모하고 촛불민심 등 시대에 부합하는 정치문화 개선을 추진코자 함.
  -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들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다문화사회로의 이해, 지역 및 계층간 양극화로 인한 갈등, 저출산고령화, 정치비효율 등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함.
  - 결혼이주여성과 북한 이탈주민의 증가 등으로 다문화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소수자 권리를 존중하는 능력, 다른 인종과 종교 등에 대한 관용력, 의사소통의 능력과 기술, 다름과 틀림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시민상호간의 자발적 존중 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
  - 지역 및 계층간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의 요구가 증대함.
  - ICT,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소통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요구되며, 무분별한 정보유통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필요함.
  
- 새로운 미래지향적 시민사회 건설과 국가발전 그리고 민족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함.
  - 출생에서 사망까지 시민사회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배울 수 있는 민주시민의 평생교육화를 추진함.

## 2. 연구목적

- 중앙차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법률안이 제안되어 있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민주시민교육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어 충청남도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 연구는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선진외국의 민주시민교육 비교 검토, 민주시민교육과정 분석, 강사양성 및 활용방안, 민주시민교육의 운영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충남형 민주시민교육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 1)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 ● 민주시민교육의 개념화

- 광의의 개념화 : 사회/정치적 질서의 구성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집단/조직/제도 및 매체를 통해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집합개념(시민자질 육성: 민주시민교육)
- 협의의 개념화 : 청소년과 성인이 사회/정치생활의 참여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계획되고 조직된 그리고 지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모든 교육시설의 초지를 가리키는 집합명칭(정치체제 안정: 정치교육)

- 마토렐라(Mtorella, 1991)는 민주시민교육은 사회구성원들이 그 사회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이념이나 가치에 대하여 확산을 가지고 정치체제나 사회체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참여하면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

####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상의 개념

-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 (2016.9.19: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민주시민교육이란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며 민주역량을 높여 공공체 삶의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교육 및 제반활동” (2015.1.22.: 이연주 의원 대표발의).

●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 상의 정의

조례명	민주시민교육 정의 규정	시행일자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017.1.5.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민주시민교육"이란 세종특별자치시민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018.4.10.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경기도민이 세계시민으로서 또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기능·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정치생활을 영위하여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017.4.12.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민주시민교육"이란 전라북도민이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기능·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016.3.25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전라남도민이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017.9.28.

2)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기능

●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

- 시민 각자가 민주적인 사회생활 또는 정치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방향감각을 획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 민주시민교육의 두 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민주정치체제의 응집력(통합성)을 높이고 일체감을 형성하는 기능(공동체의 유익을 강조하는 정의, 평등, 권위, 참여, 공동선을 위한 개인적 의무감과 관련된 가치에 주목)
- 둘째, 민주정치체제의 다원성을 수용하고 개인주의적 성격을 고양하는 기능(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에 기초한 자유, 다양성, 개인주의, 공정한 절차, 인간의 권리 등을 나타내는 자유권적 가치에 주목)
-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기능은 공익과 사익, 평등과 자유, 통일성과 다양성, 더 나아가 시민성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균형을 맞출 것인가의 과정에 직면해 있음(박재창 외, 2007:32)

## 2. 민주시민교육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 1)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 정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여주는 일. 무엇이 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어떤 정치체제가 보다 더 시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기초지식과 정보를 알려주어야 함. 정치적 판단력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어야 함
- 의사소통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수의 적용기능(다양한 상황에서 수학적 언어적용), 정보기술기능(정보의 수집, 분석, 해석, 평가, 발표 등에 ICT활용), 타인과의 협동작업기능(협동, 토론, 타인 이해 등), 자신의 학습과 수행기능(자신의 활동을 평가하고 수행결과를 확인, 평가하기), 문제해결기능(문제확인, 이해, 대안, 실천) 등이 필요함.
- 앵글과 오초아(1988)는 정치체제의 구성원들이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들 즉,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개인의 권리존중, 시민으로서의 권리의무 인식, 사회변화와 개량에 대한 관심과 참여 및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의식의 함양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 홍윤기 외(2009)는 세 개의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세부내용소개
  - 첫째,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 지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공동체와 정부형태, 헌법의 의미와 기본적 원리 및 국제관계와 세계시민성 등
  - 둘째, 시민적 가치 및 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의 가치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해, 시민으로서 개인적 정치적 경제적 책임을 떠맡으려는 성향, 타인에 대한 배려와 민주적 가치의 존중, 민주사회의 건전한 기능에 기여하려는 태도
  - 셋째, 시민적 기술 및 참여적 영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공쟁점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의 기술, 비판적 사고능력, 상호작용과 감시활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참여기능 그리고 타협과 조정능력이 포함.
- 교육과학기술부(2010)는 참여와 실천을 통한 공동체 책임의식 함양과 민주시민의 기본역할 함양과 기반조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절차와 참여, 법치와 준법, 자유시장경제 및 나라사랑, 통일 및 글로벌 시티즌십 등의 세부영역으로 구분.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상의 내용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치·역사 및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

-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참여 및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
- 민주적 토론방식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훈련
- 그 밖에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실천을 위한 모든 교육

### 민주시민교육 내용(경기도 민주시민교육조례)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정론

- 한 나라의 시민문화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 누적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경제적 근대화, 세대교체, 민주제도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과 경험, 권력교체, 책임 있는 반대당의 활동 등 사회정치체제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성 교육을 통해 정치문화를 바꾸는데 스스로 한계가 있음(박재창 외, 2007:24).
- 실제 민주시민교육이 과거 권력의 정당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권위주의 체제의 정치적 수사 내지는 동원기재로 전략했던 전력도 있음.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는 투입자원과 산출효과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일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의 가시적 성과나 이득을 보여주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임. 이런 이유로 국가주도의 민주시민교육이 호소력 있고 누구나 공감하는 과제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임.

〈표 2-1〉 민주시민교육 핵심역량 실천 모형

3단계	민주주의 역량 Democratic Competency(민주주의)		
1	다양성 존중	다원주의 관용	• 다양성/차이인정 • 어울림/조화 • 이해심 • 용서
2	참여의식	정치적 활동	• 투표/선거참여 • 투쟁 • 정치참여 • 정치의식 • 정치의식 • 저항정신 • 사회적 관심 • NGO활동
		시민활동	• 지역사회 참여 • 협동 • 소속감 • 공동체의식 • 연대 • 나눔 • 봉사
		미디어 역량	• 액세스 • 비판적 모니터링 • 미디어 활용
		민주적 의사결정	• 절차적 합리성 • 의사소통 • 비판능력 • 갈등조정 능력 • 타인의 의견청취 • 자율적 사고 • 토론능력 • 조정능력

3	세계시민형성	다문화 역량	• 공존 • 다문화 존중
		세계시민의식	• 통합적 담론 • 지속가능 발전 역량
2단계 시민성 역량 Citizenship Competency(시민사회)			
1	국가정체성	국가의식	• 애국심 • 충성심 • 올바른 국가관(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역사의식	• 정체성 • 올바른 역사의식 • 우리역사에 대한 자부심
2	권리와 책임의식	준법(규범준수)	• 책임감 • 의무감 • 준법정신 • 순종(순응) • 엄격함 • 권위존중 • 사회적 책임
		도덕성, 양심	• 정의감 • 투명성 • 도덕성 • 정직성
		권리의식	• 권리의식 • 권리주장 • 권리존중
3	신뢰와 가치	신뢰감	• 공공성 • 공익성 • 상호신뢰
		평등	• 기회균등 • 공정성/공평성 • 독점반대 • 소수자의 권리존중
		평등	• 배려 • 인권존중 • 공감
3단계 핵심 역량 Key Competency(시민사회)			
1	자율적인 행동	• 자신감 • 자기조절 역량 • 인내력 • 독창력 • 결정능력 • 유연성 • 변화즐기기 • 기회를 만들어 낼 줄 아는 자신감	
2	타인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역량	• 공감능력 • 책임감 • 팀워크/협력능력 • 분쟁/중재기술 • 커뮤니케이션 능력 • 비판처리 능력	
3	언어/공학기술 등 도구의 포괄적 사용역량	• 학습능력 • 계획능력 • 조직력 • 문제해결력 • 반성(반추) 능력 • 문맥적 사고력 • 조작기술 • 혁신의 의지 • 분석역량 • 판단능력/비판력	

자료: 이병익 외, 2008. 민주시민교육 핵심역량 실천모형 개발. 서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p.170.

## 2)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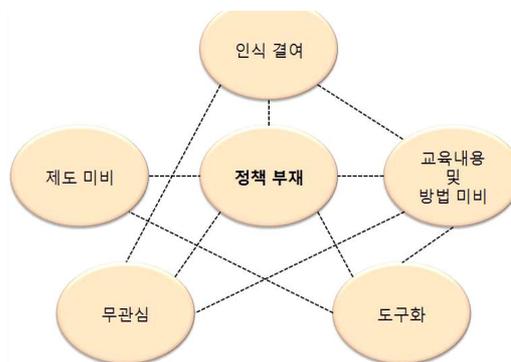
### ●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다양하게 정의

- 교육선택 기회와 폭을 넓혀준다는 이점도 있지만, 민주시민교육 내용의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내용의 불일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관성과 통일성의 결여에 이르게 하여 민주시민교육체계 전반에 혼란을 야기함.

### ● 민주시민교육은 특정정권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

- 민주시민교육의 주 내용이 정권의 이데올로기 정책을 선전하거나 홍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는 성향으로 인해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기 보다는 편향적이고 일방적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이슈에 대한 문제제기나 비판보다, 정치체제와 질서에 순응하는 정치적 의식과 태도형성.

- **민주시민교육이 학습자인 시민들의 요구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실시**
  - 요구분석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고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학습자의 참여를 유인하지 못함.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의 결여가 사회일반에 존재**
  - 관심이 효율성과 연관이 있다고 볼 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임.
- **민주시민교육의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민주시민교육의 실시를 위한 전담기구 미비와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 현재,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예”, “호” 등을 강조(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순종에 초점)하고 진보 및 전교조 등에서의 제2의 국민교육헌장 같은 것이라고 반대하였음.



[그림 2-1]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

- 민주적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정치체제의 안정화 기여.
-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주는 역할.
- 사회 통합 기능.
- 분단극복과 통일 대비.

**<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

-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정의 매우 다양.
- 특정정권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도구로서 사용될 가능성.
- 학습자인 시민들의 요구나 필요를 반영하지 않는 일방적 실시
- 권위주의적 정권의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 부정적 인식
- 민주적 시민교육의 실시를 위한 제도적 미비.

### 3.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 제정과정<sup>1)</sup>

- 1997년 10월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YMCA 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등 12개 단체가 민주시민교육포럼결성,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입법 청원
-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수, 연구자 중심의 민주시민교육협의회가 1997년 10월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의원 발의
- 1999년 민주개혁국민연합 등 30여개 단체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결성, 민주시민교육관련법 제정운동
- 시민사회 영역에서 단일한 법안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포럼, 민주시민교육협의회가 논의하여, 공동으로 2000년 1월 시민교육진흥법 의원 발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2005년 11월 민주시민교육지원 및 촉진에 관한 법안 마련
- 2010년 결성된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가 민주시민교육지원법(2011년) 마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 시민교육활성화위원회에서도 민주시민교육지원법(2012년) 마련
- 위 두 연대 단체의 법안을 중심으로 19대 국회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연주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대국회에서 다시 남인순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소관위에 접수중임.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2016.9.19.) :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소관위 접수)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2015.2.5.) : 남인숙 의원 대표발의(임기만료 폐기)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2015. 1.2): 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임기만료 폐기)

법안명	제안 일자	제안자	처리 결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2016-09-19	남인순 의원 등 12인	소관위 접수 (행안위 계류 중)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2015-02-05	남인순 의원 등 13인	임기만료 폐기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2015-01-22	이연주 의원 등 12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2007-06-05	이은영 의원 등 15인	
시민교육진흥법안	2000-01-03	김찬진 의원 등 5인 외 29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1997-10-31	박명환 의원 등 11인 외 50인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1) 문성근. 2015. 서울시민주시민교육 추진 현황 및 전망. 서울시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한 시민워크숍자료에서 참고.

-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서울시(2013), 경기도(2015), 전라북도(2016), 전라남도(2017), 세종시(2018), 성남시(2015), 안양시(2017), 하남시(2017), 광명시(2017), 김해시(2018), 수원시(2018)가 제정하였고, 준비 중인 자치단체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임. 진보교육감의 민주시민교육 추진에 따라 경기도교육청(2016), 충북교육청(2016), 전북교육청(2016), 전남교육청(2016)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였음.
- 사회적 공론화 부족, 추진 주체들 간의 이견, 추진 동력의 약화 등이 혼재되어 결국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입법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음. 따라서 현재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를 실질화 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중국에는 국가적 아젠다로 이끌어내는 경로가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음.

# 03

## 국내외 민주시민 교육과정

### 1. 국내 교육과정

#### 1) 국가기관

● 국가기관의 민주시민교육

- 국가기관의 민주시민교육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통일부(통일연수원),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 국회사무처 등을 들 수 있음.

<표 3-1> 정부부처별 민주시민교육 운영 및 지원체계

정부부처	주요 활동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경제연구학교 지정, 교과서 개정지원 - 경제/금융 관련 경시대회 개최
법무부, 법제처	-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 운영, 생활법 경시대회 개최
통일부(통일연수원), 국방부	- 남북관계, 통일, 안보 관련 학습자료 개발, 체험코스 운영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교육
국가보훈처	- 나라사랑 시범연구학교 운영, 6.25참전유공자·탈북자 보훈특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	- 초·중·고·대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국회사무처	- 어린이 국회 등 국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가인원위원회	- 사이버 인권교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연수원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하위영역으로 선거 관련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정당 및 후원회 관계자, 대학생, 교사, 일반국민에

대한 연수실시 및 연수자료 개발, 민주시민포럼 및 외국 선거관계자 연수 등을 통해 민주주의 해외 전파 등의 업무를 수행.

〈표 3-2〉 2017년 민주시민교육 연수현황

구 분		과정수	횟수(회)	인원(명)
민주시민 교육	합계	23	2,910	153,730
	정당·선거관계자과정	6	209	20,480
	일반유권자 과정	8	694	23,890
	미래유권자 과정	5	1,821	105,720
	다문화가족 등 연수	2	180	3,400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과정	2	6	240
사이버교육	합계	3	32	22,500
	민주시민교육	2	9	18,000
	열린학습	1	25	7,500

자료 : 선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civicedu.go.kr/>)

- 1996년 개원한 선거연수원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2017년 현재 오프라인 23개 교육과정, 사이버 3개 과정을 운영중에 있음.
  - 선거/정당관계자 과정 : 정당사무처 간부연수, 당원연수, 정당회계책임자 연수, 정당사이버 담당자 연수, 인터넷언론(포털업체)관계자 연수, 정치아카데미
  - 일반유권자 과정 :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여성정치참여 연수, 교원연수, 시민사회단체회원 등 연수, 청년지도자 정치캠프, 대학생학점인정과정, 대학생정치참여과정, 대학생 청년리더 스쿨
  - 미래유권자 과정 :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청소년 리더 연수, 새내기 유권자 연수, 민주주의 선거교실, 모의 선거교실
  - 한국사회 정착도움 과정 : 다문화가족 연수, 북한이탈주민 연수
  - **민주시민교육전문강사 과정 : 민주시민교육강사 양성과정, 민주시민교육강사 역량 심화과정**
  - 사이버연수과정으로 유관기관공무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과정), 공정선거지원단 (공정선거지원단 과정), 열린학습(공직선거법 등 이해과정)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민주시민의 한 영역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이해와 자신과 타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이해 등을 중요한 내용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

고 있음.

- 서울 본부, 부산인권사무소, 광주인권사무소, 대구인권사무소, 대전인권사무소, 강원인권사무소를 통해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3-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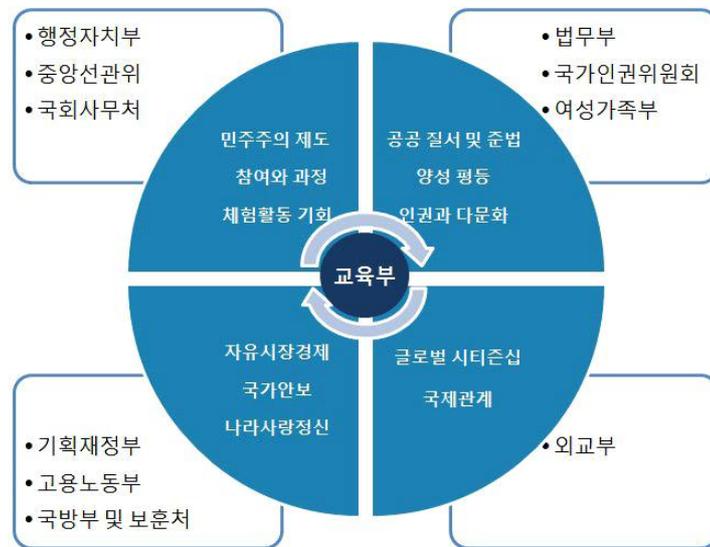
사업명	유형	사업내용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	공직자 대상 사이버교육, 교원대상사이버 교육, 시민대상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오프라인교육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인권강사양성과정, 방문프로그램, 기타
의무교육	오프라인교육	정신보건 소집교육(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분야종사자
특강교육	오프라인	인권특강(인권강사요청), 찾아가는 학교인권특강

자료 :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humanrights.go.kr/academy/main/main.do>)

-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교육프로그램을 오프라인과 사이버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하에 청렴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음.
  - 청렴연수원의 오프라인 교육과정으로 기관대상 청렴교육(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인식제고), 청렴리더십 함양과정(고위직의 윤리적 리더십 함양), 청렴리더십 함양과정(학교장의 윤리적 리더십 함양), 신규자과정(공직자로서의 역할인식 및 청렴가치 내재화 토대마련), 승진자(살무자)과정(공공기관 승진자 및 6급이하 공직자의 부패위기 상황의 대처역량 강화), 승진자(관리자)과정(공공기관 승진자 및 4-5급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역할 중요성 인식),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및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각급 기관 청렴교육 수요 충족), 청렴교육강사 강의 시연 평가(교수역량을 갖춘 청렴강사 선발), 부패대응능력 향상과정(부패취약 종사자에 대한 청렴의식 함양 및 부패대응능력 강화), 청렴교육 교원직무연수(청렴체험 교육프로그램 전수로 학교청렴교육 활성화 제고), 청렴역량 향상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청렴역량의 개발)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사이버교육프로그램은 이러닝 기본교육으로 청렴, 반부패, 공직자의 길,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부패영향평가 등 2017년 현재 81개 프로그램이 운영완료 및 운영중에 있음.
-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통일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특히, 통일미래세대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공공부문의 통일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함.
  - 원내교육개설 교육과정 : 통일정책최고위(각계 CEO를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통일준비를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로 양성), 통일교육전문강사(학교 및 사회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대상자 선발 및 강사의 역량제고), 학교통일교육(통일미래세대의 통일의식 제

고를 위하여 교육의 통일교육 전문성 향상), 통일지도자/통일미래기획/평화통일 기반구축(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수행할 수 있는 통일준비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 사회통일교육(통일교육 위원, 민주평통위원 뿐 아니라 통일준비에 대한 공감대 확산차원에서 각계인사 대상 교육), 글로벌통합교육 과정(통일 한반도의 미래상과 비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 확산에 역점을 두어 교육)을 운영중에 있음.

- 사이버개설 교육과정 : 교육교육(초중등 교원대상 통일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지도자로서 역량 강화), 사이버통일교육(공무원 및 일반인 대상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통일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질향상), 학점은행제 인정 과정(사이버통일교육 학점은행제 교양학점 인정과정을 위한 강좌)



[그림 3-1] 정부부처 민주시민교육 추진 주체별 역할

자료 : 김성수. 2015. 학교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113.

## 2)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개별 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임.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조례제정(2014년) 이후 최초로 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도 조례를 재정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표 3-4〉 광역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명	제정일자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4.01.09.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8.04.10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5.10.13.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3.25.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9.28

### (1) 서울특별시

- 서울시는 시청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가 민주시민교육 주무부서임
-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제정 2014.1.9.)
  -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추진 근거를 제정
  - 세부 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사업 위탁, 학습인정(이수증 발급), 자치구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교육 이수현황 파악 등이 있음
- 특히, 시민들의 민주주의 학습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2017년 5월 24일 개소)’ 를 민간위탁(홍사단)하여 운영 중에 있음
- 2018년 기준 예산은 약 6억3천만원(시비)이며 이중 위탁금이 5억9천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 경기도

- 민주시민교육 조례(시행 2015)
  - 대한민국과 지구사회에 걸쳐 경기도민이 민주시민으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세부 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사업 위탁, 학습인정(이수증 발급), 자치구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교육 이수현황 파악 등이 있음

- 경기도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 세부사업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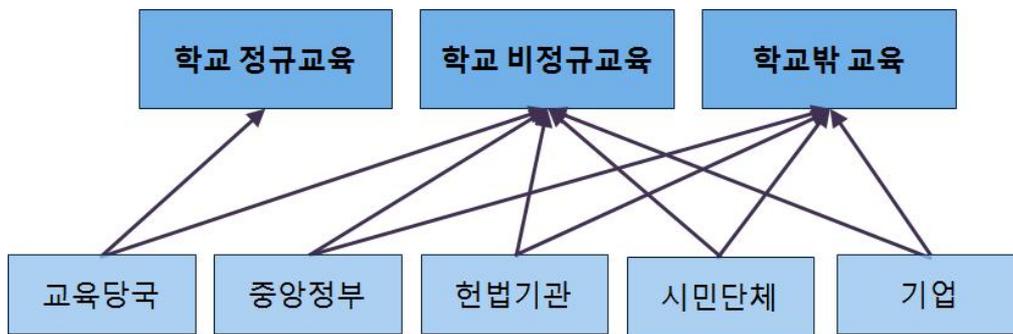
〈표 3-5〉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현황(2017년 기준)

사업명	주요내용	대상
민주시민교육 시범사업 추진	-민주시민교육 참여학습기법 교육 매뉴얼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강사) 역량강화과정 운영 -도내 민주시민교육 역량조사 및 DB 구축	경기도민,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및 기관·단체
시·군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	-시·군내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지원	시·군별 민주시민교육 운영 전문 기관 및 단체
민주시민교육 확산 및 활성화	-(지원사업) 민주시민교육 공동프로젝트 지원 -(도민참여) 민주시민교육포럼 및 도민참여사업 운영 -(네트워크)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정책 자문회의 개최	31개 시·군 및 유관기관, 도민 등

출처 : 경기연구원. 2018. 민주시민교육의 길, p 13.

### 3) 시도 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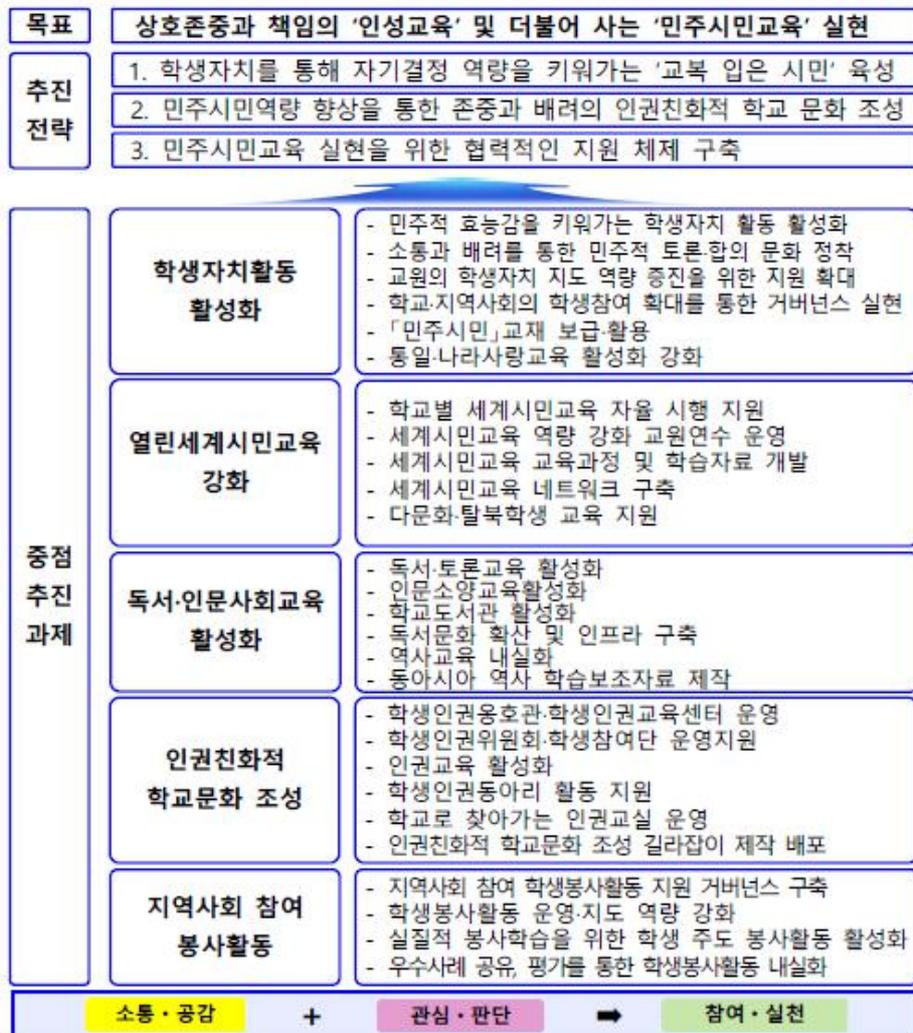
- 교육부, 교육청에서는 주로 교과서, 교육시수, 방과 후 교육 등의 형태로 학교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국가위원회 등의 중앙정부는 학교 밖 교육 형태로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며, 일부 학교 비정규교육의 형태로도 진행함. 시민단체와 기업은 학교 밖 교육형태가 주를 이루며, 일부 학교 비정규교육의 형태로도 민주시민역량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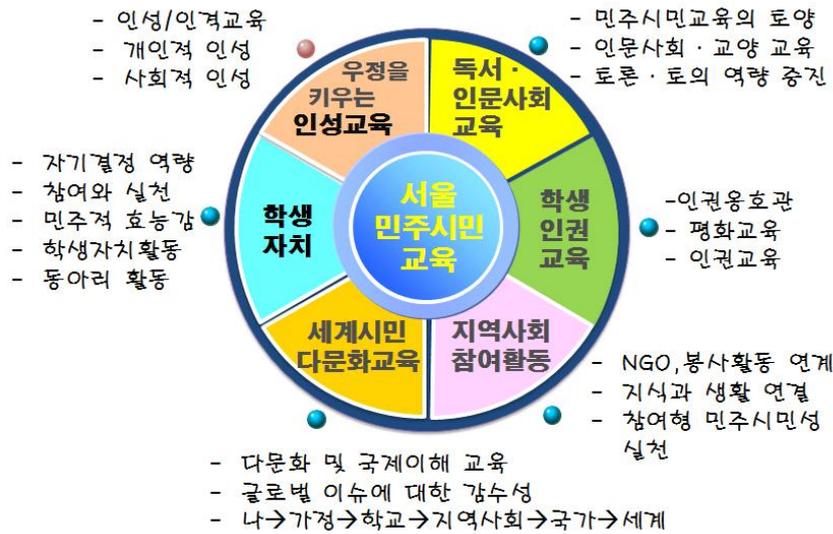
[그림 3-2] 학교 민주시민교육 교육 현황 및 지원체계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와 2017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2017.1)에 근거하여 2017년도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로 “상호 존중과 책임의 인성교육 및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육 실현”, 추진전략으로 학생자치를 통한 자기결정 역량을 키워가는 교복 입은 시민 육성, 민주시민역량 향상을 통한 존중과 배려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민주시민교육 실현을 위한 협력적 지원체제 구축을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목표와 추진전략하의 중점추진과제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열린세계시민교육 강화, 독서·인문사회교육 활성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역사회 참여봉사활동 등으로 제시하고 27개 세부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교육내용)는 다음과 같음.



- 서울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그림 3-3] 서울민주시민교육 체계

자료 : 서울시교육청. 2017. 2017학년도 민주시민교육 주요운영 현황.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평화시민교육, 세계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세계시민교육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17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민주시민 : 자율과 책임, 참여와 소통으로 협력적 삶을 실천
- 평화통일시민 : 평화통일 감수성 신장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
- 세계시민 : 세계 공동의 문제를 우리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 행동

<표 3-6>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추진과제

영역	세부추진 과제	운영 방향
자율과 자치의 학교민주주의 구현	① 학교자치 운영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자치활동 활성화</li> <li>❖ 교직원자치 실현</li> </ul>
	② 민주적 학교문화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적 의사소통 활성화</li> <li>❖ 교육공동체 책무성 강화</li> <li>❖ 학교구성원의 수평적 관계 맺기</li> </ul>
	③ 학생·교원 인권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인권 존중</li> <li>❖ 교원 인권 보호</li> <li>❖ 인성교육 충실</li> </ul>
평화통일	① 체험중심 평화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교육 활성화	통일교육	❖ 동북아평화교육 강화
	② 평화감수성 신장	❖ 평화감수성교육 확산 ❖ 생명존중교육 강화
	③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실현	❖ 회복적생활교육 활성화 ❖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운영
다문화 탈북학생 교육 내실화	① 다문화 탈북학생 맞춤형교육 운영	❖ 현장중심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 ❖ 다문화 탈북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 ❖ 다문화교육 모델학교 운영 지원
	② 다문화적 다양성 수용	❖ 다양성 존중의 어울림 교육 확산 ❖ 교원의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
	③ 세계시민교육 충실	❖ 교육과정 연계 세계시민교육 운영 ❖ 체험중심 세계시민교육 실천 ❖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

자료 : 경기도교육청, 2016. 2017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중고등학교 민주시민교육 교과서를 발간하였음.
  - 고등학교 민주시민교육 교과서는 시민과 가치(인권과 시민, 다양성과 차이, 공감과 연대, 자연과 환경, 평화와 공존), 시민과 제도(민주주의와 참여, 노동과 경제, 언론과 미디어, 시민사회의 안전)을 주요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음.
  
-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의 문제점
  -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합의된 관점이 부존재.
  -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정규교육에서 명확한 위치를 갖고 있지 못함.
  -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을 정치교육으로만 해석하고 용어를 정치교육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 것 역시 이런 문제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예)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과 미국의 시민교육센터를 국가재정으로 운영, 학교 및 학교 밖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
  - 민주시민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교과서를 활용하는 민주시민교육,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구성요소 등에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모형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교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회과의 필수과목 전환과 교사 역량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
-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사연수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실용적 교수법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음.
- 생활 속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참여와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4) 민간단체

● 민간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여 우리 사회 민주시민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에 기여(권위주의 정권 아래서도 민주시민교육의 명맥을 유지)
- 시민단체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 수행(주체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 시민들이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역할)
- 시민단체의 기능과 특성인 현장성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구현
- 생활세계 민주시민교육을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성인들의 민주시민교육 수행)
- 시민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특성과 지향에 부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시민단체의 가치체계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견해의 집합이고, 그 운용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이루어짐)

<표 3-7> 민간차원의 민주시민교육 운영 현황

시민단체	주요활동
YMCA	- 시민운동, 사회체육운동, 국제교류 및 협력 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 정신계승운동 및 민주시민교육 사업
나눔국민운동본부	- 나눔 교육사 양성, 학교 나눔 방문 교육
삼성꿈 장학재단	- 더불어 사는 배움 공동체 구현: 멘토링꿈장학, 리더육성장학, 배움터교육지원, 글로벌 장학
흥사단	- 역사강좌,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강사양성과정
전경련	- 경제교육
신문사	- NIE(신문활용교육)
교육공동체프로젝트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공동체와 삶이 있는 학교

(1)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 홍사단(서울시위탁)

● 서울시민주시민교육 정의

-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

● 민주시민교육 내용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함양에 관한 교육
-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민주시민교육학습프로그램

구 분	내용
분야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평등/정의 등 민주주의의 가치 함양</li> <li>• 헌법,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정치참여 등 민주주의의 지식 학습</li> <li>• 민주적 의사결정방식, 갈등조정과 문제해결 등 협력과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시민의 태도함양</li> <li>• 인권, 성평등, 평화, 통일, 환경, 역사 등 주제로 민주시민이 자질과 소양함양</li> </ul>
맞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여성, 한부모, 미혼모, 성소수자 등</li> <li>• 청소년, 청년, 시니어 등</li> <li>• 공무원, 시민참여예산위원, 주민자치위원, 자치구 통/반장 등</li> <li>• 회사원, 자영업자, 비영리/사회적경제 영역의 활동가 등</li> </ul>

자료: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2017. 2017년 연간사업보고서. 34.

● 사업평가

- 삶과 현장에 밀착된 다양한 주제들 다룸 : 헌법, 인권, 평화, 공공성, 지역, 예산, 마을, 자치, 성평등, 노동, 사회적경제 등
- 다양한 주체들이 시민학습 프로그램 참여 : 여성, 아동, 청소년, 청년, 시니어,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기술 습득 : 토론, 워크숍, 문화체험, 플레시몹 등 참여자 중심의 프로그램
- 새로운 민주시민교육 주체와 참여자 발굴 및 확산
- 민/관/학 전문가 그룹 참여로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 민주시민교육 학습지도 제작/배포로 다양한 정보와 학습기회 제공
- 프로그램 참여 후 인식의 변화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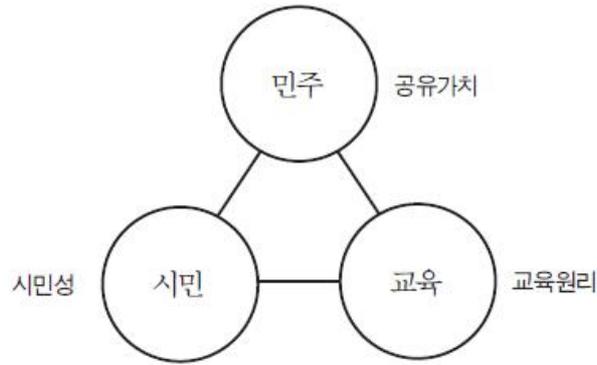
##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령에 의거해 2001년 창립

- 2006년 이후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교육,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주의 교육에 집중
- 2007년 6월 항쟁 20주년기념행사를 마무리 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2012년까지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

### ● 민주시민교육 방향과 내용

- 기념사업회는 민주시민교육을 민주, 시민, 교육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민주는 공유가치, 시민은 시민성, 교육은 교육원리로 정리하였음.
- 민주를 공유가치로 보고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원칙을 민주주의에 두었음.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에 입각한 평화, 인권, 민주주의, 양성평등, 지속가능성 등 행복한 삶, 좋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공유가치라고 정리했음.
- 시민을 시민성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시민성을 공유가치에 대한 지식을 넘어 그것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를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소통하며 공동체를 가꾸는데 필요한 원리와 역량이라고 정리하였음. 시민성을 나, 너, 우리, 꿈, 행동 등 5개 관점에서 바라보며 각 영역별 내용과 주제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함.



관점		시민성	관련주제
나	존재	자율성	인간의 존엄성, 자존감, 주체성, 자아정체성 등
너	관계	상호작용 역량	관용과 배려, 연대의식, 공감적 감수성 등
우리	사회	사회적 문해 Social Literacy	역사의식, 사회읽기, 사회현상과 삶의 연관성 등
꿈	비전	공유가치 내면화	평화, 인권, 민주주의, 양성평등, 다양성 존중 등
행동	실천	비전실현 역량	대안 도출, 다양한 참여, 정치적 의사표현 등

● 사업추진내용

- 기념사업회가 5년 동안 추진한 프로그램 운영은 다음과 같음.

프로그램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시민교육</li> <li>○ 교사연수, 주민활동가, 교육활동가, 전문가 과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민주주의 현장탐방': 연40회</li> <li>○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회~5회</li> <li>○ 대학생 봉사단 및 민주주의 현장탐방 지원: 30개 팀</li> <li>○ 시민아카데미 운영: 5개 지역 각 연1회</li> <li>○ 주민활동가 기본과정: 연2~8회 운영</li> <li>○ 교육활동가 과정: 연1~2회 운영</li> <li>○ 전문가 과정, 네트워크 과정: 연1~2회 운영</li> <li>○ 교사 직무연수: 연3~7회</li> <li>○ 현대사, 비전찾기, 정의·책임, 권위·프라이버시(초, 중등), 관계의 기술, 사회참여 원격연수</li> </ul>
--------	---	---

● 시민/사회단체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 전문성 부족(교육방법 부재, 교육장소와 교재의 빈곤, 운영자의 전문성 부족, 교육담당자의 과도한 업무부담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
- 중립성 결여(교육내용 및 방법에 있어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의 부재)
- 지원체계 미비(정치권의 무관심과 국가기관의 지원체계 전무)
- 교육의 단절성(취약한 재정, 수강생들의 수준과 관심분야 충족 위한 프로그램 부족, 일반시민들에 대한 홍보부족, 프로그램기획이나 진행자로서의 전문성 부족).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사회전반으로의 확산

- 참여자 중심교육으로의 전환/교육과정과 내용에 대한 재설계/교육전문가 양성/경험의 교류 등을 위한 투자와 노력 요구
- 시민운동 전체의 맥락 속에서 시민교육이 자리매김 해야 하고 시민교육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의 차원에서 단계적 계획이 필요함.
-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전반에 전파되도록 노력

## 5) 충청남도 지속기관/출연기관 민주시민교육

● 직속기관, 사업소

- 충청남도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개설한 도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은, 경제정책(경제교육, 사회적 경제), 청소년정책(방과 후), 평생교육(문해교실, 한국어), 충남학, 특성화고, 농수산(경영인, 수산생물, 어업, 어업전문가 등), 도의새마을, 전략산업 인력양성, 평생교육, 주민자치, 여성교육(자치, 경력단절직업, 여성장애인), 다문화가족, 정보소외계층과 관련한 내용이며, 교육대상도 일반도민, 초중고등학생, 청소년, 농수산경영인, 다문화가족, 주민자치위원, 장애인, 고령자,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다양함.
- 교육프로그램은 도 실과에서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분야별 중간지원기관, 분야별 전문기관, 도출연기관, 시민단체, 교육청(학교), 시군 등에 공모 또는 위탁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출연기관

- 충청남도 출연기관에서 개설한 도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은 젠더교육, 학교폭력예방, 상담(또래상담, 청소년상담, 청소년동반자, 청소년 전문상담, 위기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심리검사, 꿈드림양성교육, 인터넷스마트폰, 청소년, 금연, 리더십, 역사문화교육(유교, 서원, 자원봉

사, 박물관), 학교밖 청소년(문화/직업체험, 창업캠프, 대학입시),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등이 주요내용이며, 교육대상은 여성리더, 청년리더, 컨설턴트, 공무원, NGO 및 도민, 청소년 및 유관기관 실무자(상담사 등), 여객/화물종사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으로 다양하나, 주로 여성 및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음.

● 시사점

- 충청남도와 산하기관, 출연기관에서 운영 중인 도민대상 교육프로그램 중 주민자치교육, 다문화교육, 사회적경제, 장애인교육, 성평등/성주류화/성인지 교육, 자원봉사교육, 문해교육, 행복학습, 시민배움터 등은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은 도정영역별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충청남도과 시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2. 국외 교육과정

### 1) 국가별 교육과정

#### (1) 영국

- 영국의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점은 사회적/도덕적 책임, 공동체 참여, 정치적 소양증진 등 세 가지로 요약
  - 첫째, 사회적/도덕적 책임. 학생들은 학생 서로에게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함.
  - 둘째, 공동체 참여. 학생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가족으로부터 학교, 이웃,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을 돕는 이점들을 배움
  - 셋째, 정치적 소양. 학생들은 지역에서 국가, 국제 차원에서 영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 배움. 학생들은 공동체생활에서 스스로를 유용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과 가치를 배워야 하며, 이는 정치적 지식 이상을 의미함.

● 교육방법

- 영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실천을 중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토론과 의사소통의 교육이 강조)

(2) 미국

● 미국의 민주시민교육 내용은 시민적 지식, 시민적 기술, 시민적 태도 등 세 가지로 요약

- 첫째, 시민적 지식은 시민이 알아야 할 지적 내용으로 시민생활과 정치, 시민생활과 정부와의 관계, 미국정치체제의 기본원리,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헌법 질서, 미국과 국제관계,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할 등이 포함. 이외에 환경, 성비, 소비자, 도덕, 다문화교육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지식으로 확장됨.
- 둘째, 시민적 역량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지적/참여의 역량을 의미함.(지적역량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설명, 분석, 평가, 옹호의 능력을 의미하고, 참여역량은 상호작용, 비판과 감시작용, 투표와 같은 영향력 행사 등)
- 셋째, 시민적 태도는 민주적 질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서적 특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덕적 책임감, 자기규율, 인간존중, 관용성, 공공의 의무, 법의 준수, 비판적 태도 등을 포함.

● 교육방법

- 미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체험위주의 교육방식으로 설계(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동료와의 협동 작업을 거쳐, 정부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험을 함).

(3) 프랑스

● 프랑스의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혁명 정신에 의거하여 개인이 누리고자 하는 권리 이상으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각자가 갖는 독자성, 즉 다름과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는 관용의 가치를 함양하는데 있음.

- 자유주의 기본이념과 시민권에 대한 이해
-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갖는 독자성의 유지와 상호존중의 가치
- 공적 질서의 유지를 위한 규범의 이해와 사회적 연대성의 강화
- 비판의식의 논리적 사고력 배양

- 글로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시민의식 등을 중심

● 교육방법

- 프랑스의 민주시민교육의 교육방법은 민주적 토론수업을 통해 공공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성을 함양한다는 원칙을 지님 : 토론방식의 교육

(4) 독일

●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주요내용

- 첫째, 민주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사회의 성찰된 수용과 실천을 위해 민주주의 규칙의 본질과 절차, 그리고 비판력과 합의자세 등을 교육
- 둘째, 역사적 결정과 발전의 인과관계를 일깨워 주며, 나아가 역사의 연속과 중단에 대해 설명함.
- 셋째, 시사문제 뿐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 등의 미래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함.
- 넷째, 이웃이나 타민족 집단 또는 다른 사회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타파
- 다섯째, 국제관계 및 세계경제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외부변수와 국내문제의 상호작용을 밝혀 줌.
- 여섯째, 대중매체의 사회적 역할과 효과에 관해 논의하고, 대중매체의 한계와 전달내용에 대한 비판적 대응력을 배양함.
- 일곱째, 통일 이후 새로운 체제에 대한 동족 주민의 올바른 적응을 위해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 정리와 아울러 민주적 사고와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
- 여덟째, 통일의 완성을 위해 독일인 전체가 개방적으로 대화하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역점을 둠.

● 교육방법

- 보이텔스바흐 협약(1976)이 독일 정치교육의 기본원리와 방향을 제시함
- 논술, 연설, 활동과 체험중심, 소그룹별 자유시간, 질문과 토론으로 구성.

## (5) 일본

### ● 일본의 민주시민교육은 학교교육과 성인교육으로 구성

- 첫째, 학교교육은 초중등 학교 사회과와 도덕교육, 고등학교 공민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초중등학교 사회과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초적인 자질, 고등학교 공민과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실제적인 자질을 함양, 초등학교에서는 타인에 대한 관심, 중학교 사회과에서는 사회에 대한 관심, 국토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이는 민주시민의 기초소양을 교육, 현대사회, 윤리, 정치경제로 구성되는 고등학교 공민과목에서는 현대사회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의 존재와 삶에 관한 지각 즉, 정체성을 함양하고 민주적, 평화적인 국가 및 사회의 유익한 형성자가 되기 위한 자질을 함양
- 둘째, 성인교육은 국민의 역할과 시민의 공민적 자질,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 등이 중요내용.

### ● 교육방법

-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는 체험방법을 권장(각종 통계, 연감, 백서, 신문, 서적, 기타자료의 활용, 관찰, 견학, 조사, 연구결과의 발표 및 정리, 컴퓨터나 정보통신네트워크의 활용 등의 방법으로 교육).

## 2) 국가별 비교

### ●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는 국가별로 다소 상이한 방식과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독일과 같은 중부유럽에서는 ‘정치교육’ 이라는 용어를 사용
-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들을 자율적이고 공동체적인 시민을 배양할 목적으로 시민교육(citizenship) 또는 민주시민교육(democratic civic education)으로 표현
- 일본 : 관치의 인상을 주는 공민교육이라는 용어사용
-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는 ‘시민’ 이나 ‘공존’ 이라는 용어들을 강조하는 의미로 공동체 안에서의 조화로운 삶의 공존을 위한 ‘시민 혹은 공존교육’ 의 의미를 선호하고 있음.
-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랜 서구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지속성**’ 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함양**’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결합하여 실시.

<표 3-8> 외국의 민주시민교육의 비교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명칭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	시민교육/ 시민성 교육	시민교육	정치교육	공민교육
주체	국가(주정부) / 시민사회	국가/시민사회(국가교육체제와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국가/시민사회(공교육체제와 사회와의 유기적 연계)	국가/비정부기구/ 시민단체(포괄적이고 다원적 접근)	국가/시민사회(중앙과 지방 사이에 유기적 연계가 높은 풀뿌리형)
정의	민주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지식, 권리와 책임을 위한 기능, 민주적 질서의 유지·발전을 위한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	영국의 보편적 가치(개인과 가족의 존중, 사회 관계의 유지, 다양성의 가치와 환경보존, 정의, 신뢰, 정의를 유지하는 교육)	프랑스 혁명이념(자유, 평등, 사회적 연대)을 실현·유지하고, 프랑스 시민으로서 자질과 덕성 함양 교육	국민을 민주시민으로서 육성하고, 정치적 사회적 비판능력과 공명한 정치 의사 형성을 촉진하는 교육	비판적 판단 능력을 배양하고, 활력있는 독립적인 시민정신을 양상하는 교육
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0년대 : 미국적 가치를 옹호하는 교육 실시</li> <li>· 1980년대 : 국가경쟁력과 전통적 문화의 강화</li> <li>· 1990년대 : 다문화 교육의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4년 : 교육법(Educational Act) 제정, 시민교육의 내용과 성격 강화</li> <li>· 1988년 : 교육개혁법안에서 『시민성 교과 신설과 타교과의 연관성 강조』</li> <li>· 2002년 : 초등학교에서 『시민성 교과』를 선택, 중등학교에서 필수로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0년대 : 국가관 교육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공교육에서 소멸</li> <li>· 1990년대 : 민주적 가치 확산을 위해 시민교육 부활</li> <li>· 1999년 : 교육과정에서 사회, 법, 시민 교육 신설</li> <li>· 2001년 : 민주시민교육법 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5년 이전 : 체제 순응형 국민 교육으로 실시</li> <li>· 통독이전(1989) : 정치활동에 대한 실천적 활동과 규범 규정, 통일 등을 교육</li> <li>· 통독 이후 : 통일내용을 삭제하고 민주 시민 육성과 사회통합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5년 이전 : 수신, 교도를 통해 국가주의와 군국주의 교육 실시</li> <li>· 1947년 자리, 역사, 수신 교과 폐지하고 『사회』 신설하여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li> <li>· 1955-학제까지 : 민주 시민교육과 국가주의 교육(반공교육, 애국심 교육) 사이를 넘나들</li> </ul>
목표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으로서 개인의 민주적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함양</li> <li>· 미국적 민주주의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육성</li> <li>· 다양한 사회, 문화적 차이를 하나의 가치로 통합하고, 다문화 사회의 유지·능력 함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도덕적 책임감, 공동체적 참여, 정치적 해력 등을 함양</li> <li>·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li> <li>· 시민성 교육의 강화와 시민 교육의 다양성 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주의 가치인 토론과 참여 능력 배양</li> <li>·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시민과 인간 창조</li> <li>· 민주시민에 대한 이론적 내용보다 적극적인 실천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 사안에 대해 판단하고 정치에 참여 능력, 토론과 비판 능력의 함양</li> <li>·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li> <li>· 정치사회경제의 측면에서 민주화 의식을 고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일본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의 육성</li> <li>· 인간 존중과 과학적 탐구 정신에 기초하여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한 판단력, 공민으로서의 필요한 능력과 태도 함양</li> </ul>
방법	교과서 읽기, 교과서 내용 분석 및 토론 참여, 시사 문제에 대한 토론, 그룹 프로젝트 참여, 보고서 작성	활동·학습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경험하면서 학습, 가상 상황에서 활동 학습, 집단토론 및 토론, 프로젝트 학습, 전일제, 반일제로 이동 권리의 날 행사, 모이서 거견학	지식의 전수보다 토론 수업, 쓰기와 읽기의 균형, 이론과 활동의 균형, 즉흥적 표현과 수사의 균형, 지적 표현과 감성 표현 사이의 균형, 전통과 혁신적인 교수법의 균형	교회나 주입식 교육 금지, 정치적 학문적 논쟁, 정치적 관심사의 관찰과 해결 능력 배양, 대화 학습, 디지털 매체 활용 학습, 놀이 학습, 연구 여행 및 연수 여행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교실 내 토론, 이론적인 의견 표현, 상호간의 대면 접촉, 문제 해결 방법의 활용, 지식 습득의 강조

자료: 이범용, 2015. 한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방향 모색, 초등도덕교육 제49집,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 3. 소결

#### ● 국내외 민주시민교육

- 우리나라 중앙정부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은 선거(선거연수원, 선거관리위원회), 통일(통일연수원) 등 민주시민교육의 일부영역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에서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상이 학생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음.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못하며, 국가 차원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제정되지 않고 있고 있어 종합적이고 일반화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민간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사회 민주시민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했음.

#### ● 국외 민주시민교육

- 외국의 민주시민교육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같이 시민교육이 이념적 토대와 법령, 전문기관 등이 확립된 상태에서 다양한 사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외국 민주시민교육의 주요내용을 보면, 영국은 사회적/도덕적 책임, 공동체 참여, 정치적 소양증진 등 세 가지, 미국은 시민적 지식, 시민적 기술, 시민적 태도 등 세 가지, 프랑스는 혁명정신에 의거하여 다름과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는 관용의 가치를 함양하는 내용, 독일은 보이텔스바흐 협약(1976)에 근거하여 정치·경제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지식과 능력 배양, 일본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기초자질과 공민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 민주시민교육의 내용<sup>2)</sup>

- 확고한 민주주의의 가치, 역사, 정치체도에 대한 이해.
- 시민성(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태도와 덕성)
-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습득, 정치참여나 실천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역량
- 환경교육, 통일교육, 경제교육, 다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와 연계
- 교육내용을 일일이 열거함으로써 특정교육과의 연관성만을 강조하거나 열거되지 않은 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 정선애. 2017.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시민정치포럼 3차 월례포럼. 16-17.

● 민주시민교육 표준교육과정 일반원칙

- 보이텔스바흐 원칙을 준수한 학습요목 작성 의무화

### 보이텔스바흐 협약

독일의 작은 도시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독일의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정치교육의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이것이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다. 이 협약은 본래 학교 정치교육의 지침으로 만들어졌으나 모든 공교육 영역으로 확대 적용되어 독일 정치교육의 헌법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협약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골자로 한다.

**첫째,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이다.** 사회적 쟁점사항에 대해 학생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사가 무엇이 바람직한 견해인지를 알려주거나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둘째, 논쟁 원칙이다.**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은 학교에서도 논쟁을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주입금지 원칙을 실천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견해, 특히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의견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또한 이에 대해 토의와 토론을 하지 않으면 슬그머니 주입과 교화로 변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스스로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의 정치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탐색해 보고, 또한 자신들이 그런 정치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다양한 수단과 방안을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 04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및 활용방안

### 1.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

#### 1) 강사양성 필요성

- 민주시민강사, 민주시민교육사, 시민연구자 등 민주시민교육전문가
  -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할 전문 강사는 선거연수원, 인권위원회 등의 정부 부처와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양성되어 왔음. 정규교육과정의 교사와 달리 특별한 자격이 있거나 인증 과정이 있지 않으며 양성 이후 활동처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에 비해, 강사양성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그림 4-1] 충남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 민주시민교육을 기획·운영하고 지역에서 실행 할 뿐 아니라 시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사(독일 정치교육 주체나 영국 문화예술교육 중간 지원자)가 필요함,
- 또한, 시민연구자를 배출하여 시민 스스로 충남 민주시민교육의 역사를 기록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함
- 이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사명감 및 헌신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에 대한 이해 및 교육자로서의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먼저 민주시민교육의 취지나 내용, 가치와 윤리, 교육방법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과 유지가 필요함
- 단, 자격증을 민주시민교육의 획일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주체 및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현장 사례를 공유·발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

## 2) 강사양성 사례

- 민주시민교육 강사는 정부부처, 지방정부, 시민사회 단체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주체의 운영 목적과 사업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고 있음
- 정부부처의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인권위원회, 통일부, 법무부 등이 관련 교육에 필요한 내·외부 전문가를 양성하여 실제 교육 강사로 활용하고 있음

<표 4-1> 정부부처별 민주시민교육 및 관련 교육 강사양성 사례

정부부처	주요 내용
중앙선거위(선거연수원) 및 지역별 선거위	- 선거위에서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주권, 선거·정치 과정) 강사 선발 및 교육, 활동 지원
인권위원회	- 지역·분야별(노인, 이주민,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인권 강사를 양성
통일부	- 심사를 통해 선발된 통일교육위원 중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운영
법무부	(법교육) 법학 및 사회교육 전공자 중 법교육 강사 연수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강사 등록 및 활동 지원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 1급,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 지방정부의 경우 광역 평생교육진흥원이나 기초 단위 평생학습관에서 민주시민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대학연계 시민대학 과정에 민주시민교육과정<sup>3)</sup>이 개설되어 있으며, 과정의 한 파트로 시민교육운영론을 개설하여 민주시민교육기획자를 위한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3) 2015년 기준 민주시민교육과정은 시민교육론, 시민정치론, 시민실천론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강좌별 20시간, 총 60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4-2〉 서울시 시민대학 시민교육론

회차	주제	강의명
1차. 민주시민교육 기본론 (개념, 역사, 이론, 실태)		
1	유능한 주권자로서 좋은 시민	좋은 시민 없는 좋은 민주주의는 없다. - 민주주의, 민주시민,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그 필요성 - 정치교육, 시민교육, 시민성 교육, 공민교육 등
2	역사	민주시민교육의 역사 (연원과 현대적 계기)
3	실행 사례	민주시민교육의 실행 사례 (미국, 독일, EU)
4	작동	민주시민교육의 작동(주체, 영역, 내용)과 작동 원리 - 보이텔스바흐 협약
5	체계와 기능	한국형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와 기능 (시민지식, 시민가치, 시민기능, 시민실천)
2차. 민주시민교육 운영론 : 시민적 이성과 감성의 발현		
6	기획/조직	민주시민교육의 기획과 조직 (주제 선택, 방식 결정, 강사 선정, 홍보 및 참여자 모집, 결과 기술과 평가, 사후 관리)
7	의사표현	비판적 사고와 정치적 글쓰기
8	의사소통	정치적 의사소통 (발제, 대담, 연설, 토론 등)
9	문화매체	문화를 통한 정치 (문자매체, 영상매체, 음향매체 등)
10	뉴미디어	디지털 매체의 진화와 민주주의 (SNS, 웹2.0에서 웹4.0까지)

- 그 외 수원시 평생학습관,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태안군 평생학습센터, 서천군 종합교육센터 등에서 독일정치교육방법론과 퍼실리테이션 기법 등을 활용한 모더레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함. 시/군 단위의 교육은 특별히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에 중점을 두기보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일반 강사들의 민주적 수업 운영을 위한 교수 역량을 키우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중앙 YMCA와 YWCA 및 지부, 한국자유총연맹, 흥사단, (사)대한민국 유권자총연맹 등에서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정부 위탁이나 공모 사업을 수주하여 양성된 강사들이 직접 강의 활동을 진행하기도 함
-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더라도 활동가 양성과정, 회원 교육 등에 모더레이터 양성과정을 접목시킨 경우는 훨씬 많은 편임

〈표 4-3〉 시민사회단체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사례

단체명	주요 내용
YMCA	지역 YMCA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과정 진행, 특히 교육 진행자인 모더레이터(퍼실리테이터) 교육과정이 다수 도입 됨
YWCA	지역 YWCA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과정 진행
한국자유총연맹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전문교수를 양성하여, 통일부~
흥사단	민주피아 강사양성과정- 영화를 통해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할 전문 강사 통일교육강사양성과정-평화통일교육 이론 및 방법론, 강사역량 강화 등
(사)대한민국 유권자총연맹	연맹회원을 중심으로 강사 과정 운영

- 정부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강사 양성과정은 주체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양성과정은 일반 성인 참여자들을 위해 이들에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론과 교수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됨
  - 이러한 과정은 시기에 따라 독일 정치교육방법에 영향을 받은 교수법을 중심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교수자 양성 이후 특별한 활동처로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짐
  - 또한 지역의 현안을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소속감과 전문성이 부족함

## 〈참고〉 흥사단 민주시민교육지도사(강사) 양성

### ① 민주피아 강사양성 과정

- 민주주의와 유토피아의 합성어로 영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즐겁고 신나는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과정

### ②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 과정

- 민주시민교육 평화와 통일을 접목시켜 평화감수성 깨우기, 평화통일교육 이론, 평화통일교육 적용, 실기 등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종료 후 민주시민교육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 2017 민주피아 강사 양성과정

D프로젝트! 민주피아 - 영화를 통한 가치덕목

**민주피아 강사양성 과정이란?**  
민주주의와 유토피아의 합성어로 영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즐겁고 신나는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하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전문가 특강** 이은숙 (흥사단 교육수련원장)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심성보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21세기 시민성은 어떻게 형성 되는가  
서동일 (명절별복종교사 감독) 영화와 소통하기, 감독과의 대화

(1회차) 2017.7.08.(토) 10:30~17:50  
(2회차) 2017.7.15.(토) 10:30~17:50  
(3회차) 2017.7.22.(토) 10:30~18:30

**대상** 영화를 통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장소** 흥사단 3층 강당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22)  
**비용** 8만원 (자료집 및 점심제공 등)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회원 30% 할인  
국민은행 031601 04 150629 (사)흥사단(교육운동)

**신청** 구글 온라인 신청 <https://goo.gl/forms/7p93LahjLQICSHAY1>  
(참가비 입금 순 마감)

**문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 (02-741-2013)

\* 3회차로 구성된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시강 및 평가를 거쳐서, 2017 민주피아 강사(학교 현장 파견 등) 및 민주피아 연구모임 2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 과정 모집 -평화, 통일 편-

**모집입니다.**

일 시 : 10/24(토), 11/7(토), 11/14(토), 11/21(토) 오전 9시~ 오후 6시  
장 소 : 흥사단 지식나눔실  
모 집 : 신청순 20명  
참 가 비 : 15만원 (교재포함, 자격증 발급비 별도 / 흥사단 단우, 흥민통 회원 20% 할인)  
특 전 : 민주시민교육지도사 2급 자격 부여 (교육과정 30시간의 출석 80% 이상, 필기시험 70점 이상 취득시 자격증 수여)

**강사 소개**

김혜순 : (한)중앙대 교수/(전)독일괴테대학 한국학 학과장  
(전)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LA) 교수  
장대진 : (한)천왕초 교사  
(한)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 서울민주시민 교육위원회의 공동대표

**강좌 일정**

**평화 감수성 깨우기(10.24)**  
01강 [김혜순] 공동체와 통일교육 (120분)  
02강 [김혜순] 평화통일 교육 (120분)  
03강 [장대진] 평화로 돌이켜 보기 답사 (180분)

**평화통일교육 이론 및 방법 I (11.07)**  
04강 [김혜순] 평화로 바라보는 통일교육 (90분)  
05강 [김재현] 음악으로 나누는 평화 이야기 (90분)  
06강 [전승환] 중등 수업사례1 (90분)  
07강 [전승환] 중등 수업사례2 (90분)  
08강 [조성두] 도산사상과 평화통일교육 (120분)

**평화통일교육 이론 및 방법 II(11.14)**  
09강 [김혜순] 유럽연합의 민주시민 교육 (90분)  
10강 [김혜순] 참여와 통일교육 (90분)  
11강 [장대진] 참여 활동수업의 실제 (120분)  
12강 [김전현] 토론 중심 수업의 실제 (120분)

**실습(11.21)**  
13강 [장대진] 강의안 작성법1 (120분)  
14강 [장대진] 강의안 작성법2 (120분)  
15강 평화로 이야기하는 통일 수업안 작성 (240분)

문 의 : 02-3673-3825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1-01-0416-073(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출처 : 흥사단 홈페이지(<https://www.yka.or.kr/>)

### 3) 강사양성 방안

-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가는 교육 전반을 운영하는 기획자와 교수자로 양성될 필요가 있음.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이 많은 주체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산별적으로 존재하고, 공적 교육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수준과 성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임
- 예를 들어, 평생교육전문가라 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의 경우 국가 자격으로 1급, 2급, 3급의 단계별로 양성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4-4〉 급수별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의 주요 내용

구 분	취득요건	승급과정
1급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승급시험
2급	대학/학점은행기관 : 필수 5과목 + 선택 5과목 대학원 : 필수 5과목	3급 취득 후 3년 경력 + 승급시험
3급	대학/학점은행기관 : 필수 5과목 + 선택 2과목	-

- 그러나 자격증 이후 이들의 지속적 역량 강화 지원이나 현장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한계를 보임. 이에 민주시민교육 전문가의 경우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뿐 아니라 이들이 지속적으로 학습-실천할 수 있도록 학습 모임 결성 및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서울시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에서 민주시민교육전문가를 ‘민주시민교육사’로 지칭하고 평생교육사와 유사한 양성 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음. 아래 〈표〉와 같은 교육 이수시 서울시장 명의의 ‘민주시민교육사(2급)’ 또는 ‘민주시민교육 교육활동사’ 자격증 발급함

〈표 4-5〉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사 2급 양성과정

구 분	필 수	비고
기 초	시민교육론 20시간	기획 및 실습과정 (1년)
	시민정치론 20시간	
	시민실천론 20시간	
보수교육	연간 10시간	

-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시·군 평생학습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평생교육 활동가로서 학습매니저를 양성하여, 읍·면·동 혹은 마을을 기반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들은 지역주민의 학습활동 지원 뿐 아니라, 학습자원 조사·기획·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함
- 학습매니저의 활동은 주로 자원 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기도 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활동과 연계하여 매니저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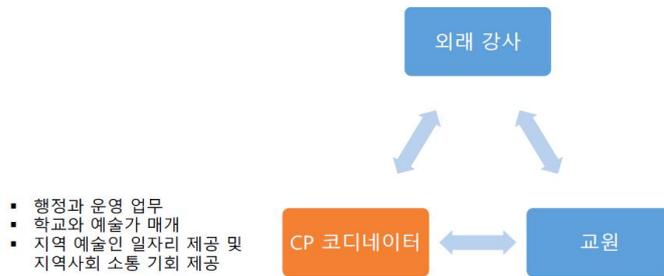
## (1) 민주시민교육사

- 자격 : 충남 도민으로서 민주적인 지역사회 형성과 발전에 동의하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교육 기획 및 운영 역량을 갖춘 전문가
- 양성과정 : 필수 + 선택 과목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하기 보다는 기존 시민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한 도민을 선발하되, 민주시민교육 관련 주제를 워크숍이나 학습모임 방식으로 과정을 운영하여 실질적 기획-운영 역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인정 : 민주시민교육센터(충남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과정을 운영·관리하며, 센터장(진흥원)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

### 〈참고〉 독일 정치교육 전문가

- 트레이너-레퍼레이터-도첸트: 독일은 교육주체를 트레이너(훈련자), 레퍼레이터(담당자, 책임자), 도첸트(강사)로 구분함. 이들의 역할분담이 명확한 것은 아님. 기관 내 활동하는 교육주체들은 강사처럼 학습자와 직접 만나는 일이 적고 행정 지원 업무가 많으며, 강사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는 일 등을 함. 또한 프리랜서 강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보장 시스템으로 '프로필 패스포트(강사 인증제도)'를 운영함. 강사 그룹은 연방정치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여하여 역량을 키우고 강사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음
- 멀티플리케이터 : 한국적 개념으로 시민 지도자(리더). 관심이 낮은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촉진하고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함. 정치교육에 있어 정치에 일반 학습자보다 조금 더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칭하며, 이들을 별도 교육하여 지도자로 양성함. 강사 그룹에 비해 훨씬 다양한 매뉴얼이 제작되어 제공 됨

### 〈참고〉 영국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



-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은 영국 문화예술교육의 대표적 정책으로 문화예술가들이 학교 교육에 투입되어, 혁신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실행을 가능하게 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가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하되, CP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학교 교사와 외래강사(예술가)들의 중간 지원 역할을 수행함
- 지역별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CP사무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역·학교·학급별 교육과정 구성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의 CP 총괄사무소(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가 총괄 업무를 맡음

- 또한 지역사회나 학교에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자원 연계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의 이해, 교육기획서 작성 등의 실무적 교육을 수업형태로 운영함

〈표 4-6〉 민주시민교육사 양성과정 주요 커리큘럼(안)

구 분	과정명	내용
워크숍 및 이론학습	시민교육 활동 현장 공유	- 학습자 현장 활동 공유 - 민주시민교육 기획 및 실천 방안 논의
	시민교육 이론	- 배경, 역사, 사례 등 - 학습자 토론 및 정리
	시민정치 및 지역 사례 학습	- 의미, 원리, 사례 등 - 지역 시민정치 현안 - 학습자 토론 및 정리
교육 이론	(초·중·고) 학교교육 과정의 이해	-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 접목방안 및 지역사회 역할 탐구
	평생교육 원리 및 운영, 교육과정의 이해	- 지역 평생교육 및 성인학습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 적용 방안 및 역할 탐구
	교육 기획 및 운영	- 교육 기획서 작성과 운영 방법 - 교육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방법

## (2) 민주시민교육 강사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교수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
- 초기에는 관련(〈표 참고〉) 영역 강사 활동가를 중심으로 양성과정을 운영하되, 향후 전체 도민을 상대로 과정을 운영
- 민주시민교육센터(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과정을 운영·관리하며, 센터장(진흥원)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

〈표 4-7〉 민주시민교육강사 양성과정 주요 커리큘럼(안)

구 분	과정명	내용
워크숍 및 이론학습	시민교육론	- 민주주의의 이해, 시민성과 학습, 시민교육 방법 등
	시민정치론	- 민주주의의 이해, 국가와 개인, 민주국가의 역사와 현재, 헌법 등
	시민실천론	- 사회권과 경제권, 지방분권, 시민참여권, 세계시민과 대한민국 시민 등
교수방법론	학습자와 지역사회의 이해	- 생애주기별 학습자 이해, 지역의 이해, 학습의 의미 등
	민주시민교수방법론	- 민주적 수업운영을 위한 교수법, 의사결정 방식, 토론 수업 운영, 비주얼씹킹 등
	강의 기획 및 계획서 작성	- 강의기획 및 계획서 작성, 강의 자료 준비 방법 등
	강의 시연 및 피드백	- 교수자별 강의 시연 및 피드백

### (3) 시민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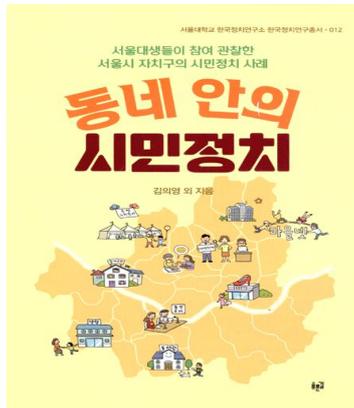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지역 민주주의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아마추어 아카이비스트 양성하기 위해 시민연구자로서 필요한 연구 역량을 강화 지원

〈표 4-8〉 민주시민교육연구자 양성과정 주요 커리큘럼(안)

구분	과정명	내용
이론	민주주의 아카이브의 이해	- 민주주의의 이해 - 기록의 중요성과 공공적 가치
	일상의 기록 방법	- 일상 글쓰기와 다듬기 -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기록남기기
	구술사 인터뷰와 기록	- 인터뷰 기법 및 기록 하기
연구실천	지역 민주주의 현장 탐방	- 생활 민주주의가 실천되고 있는 지역의 현장/ 민주주의 역사 관련 명소 방문 및 기록 실천하기
	기록물 정리 및 공유	- 탐방 주제 정리 및 공유 작업
	향후 학습 및 활동 계획 수립	- 강좌 평가 및 향후 활동 계획 수립 - 학습동아리 구축

#### 〈참고〉 공주시 및 희망제작소 사례

- ① 공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 ‘시민기록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 빠르게 변해가는 지역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기록하여 미래의 과거가 될 현재의 공주시를 남겨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기획 됨
  - 주요내용 : 공주 일상 기록의 중요성 공감하기, 일상 기록화 방법(글쓰기, 사진, 영상, 구술채록)에 대한 이론적 학습, 일상 기록화 방법(글쓰기, 사진, 영상, 구술채록) 실습 및 체험, <내가 기록한 공주의 모습> 주제 발표
  - 활동 : 공주학 아카이브 구축 사업 참여
- ② 희망제작소 ‘동네 안의 시민정치’
  - 서울대학교 시민정치론 강의를 수강한 35명의 학생들이 서울시 자치구의 다양한 사례를 찾아내고, 시민정치의 관점에서 정리한 책
  - 성북구의 마을민주주의 사업, 성동구 수제화 협회 등의 사례가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음



출처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http://www.makehope.org/>)

〈참고〉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의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프로그램

##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초급)



- 일 시 : 2016년 6월 15일(수) ~ 7월 13일(수) 총 5강 오후 2시 ~ 5시  
 장 소 :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삼산공간  
 대 상 :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활동하고자하는 학부모, 시민 20명 내외  
 참 가 비 : 개인조합원 5만원, 비조합원 8만원  
 • 입금계좌 - 농협 301- 0147- 9645- 11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 환불규정 - 강좌 2일전 오후 6시까지 100%, 강좌 1일전 오후 6시까지 50% 환불, 강좌 당일 환불 불가  
 모 집 : 20명 내외(입금선착순, 15명 미만 접수시 폐강 될 수 있음)  
 신 청 :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카페(<http://cafe.daumnet/bumodul>) 댓글이나  
 전화(233- 9986) 또는 소속단체 홈페이지로 신청.  
 주 최 :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후 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회	날 짜	주 제(제목)	강 사
1강	6월 15일 (수)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감수성, -인권의 의미, 원칙, 가치, 역사 -인권과 법	오문완 -울산대법학과 교수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2강	6월 22일 (수)	〈시민,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시민의 의미, 가치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시민참여와 민주공화국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전 국가인권위정책과장
3강	6월 29일 (수)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아동, 청소년 인권 -인권친화적인 학교, 교실 내 학생인권 -학교 안 민주주의의 실현	-인권교육공동체 참
4강	7월 06일 (수)	〈사회와 노동에서의 민주주의〉 -노동인권이란? -노동의 권리, 노동에서의 권리	-평등사회노동교육원
5강	7월 13일 (수)	- 인권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의 원칙과 방법, 그리고 기획과 시연 등 워크숍	-인권교육공동체 참

\* 교육프로그램(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제2기 민주시민교육 강시양성 프로그램(초급)

촛불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바꾸었습니다.  
 대통령을 바꾸는 것은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내 삶을 바꾸는 촛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출발이 민주시민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정권의 수준은 시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민주시민이 되어  
 다른 사람을 민주시민으로 이끄는 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일 시 : 2017년 9월 20일(수) ~ 10월 25일(수) 총 5강 오후 3시 ~ 6시  
 장 소 :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상산공간(예정)  
 대 상 :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활동하고자하는 학부모, 시민 20명 내외  
 교 육 비 : 9만원(개인조형원 또는 울산시민연대 회원 6만원)  
 입금계좌 : 농협 301-0147-9645-11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환불규정 : 강좌 2일전 오후 6시까지 100%, 강좌 1일전 오후 6시까지 50% 환불,  
 강좌 당일 환불 불가  
 신청방법 :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카페(<http://cafe.daum.net/bumoedul>) 댓글이나  
 전화(233-9986) 또는 소속단체 홈페이지로 신청  
 주 최 :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울산시민연대



회	날 짜	주 제(제 목)	강 사
1강	9월 20일 (수)	인권이란 무엇인가?	장은주 -영산대 교수 -‘시민교육이 희망이다’저자
2강	9월 27일 (수)	시민,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장은주 -영산대 교수 -‘시민교육이 희망이다’저자
3강	10월 11일 (수)	학교와 민주주의	노옥희 -부모교육협동조합 이사장
4강	10월 18일 (수)	노동과 민주주의	평등사회노동교육원
5강	10월 25일 (수)	민주시민교육 기획과 시연	민주시민교육 강사단

※ 교육프로그램과 강사는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2. 민주시민교육 강사 활용방안

### 1) 민주시민교육사

- 민주시민교육사는 지역사회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 담당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평생교육사, NGO 교육 담당자, 관련 교육 기획자·강사 등을 선발하여 교육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
- 이들은 과정 종료 이후 학습동아리(혹은 실천공동체) 등을 형성하여 지속적 학습 모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상 향후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프로그램 기획·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2) 민주시민교육강사

- 도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교육 강사 섭외시 우선 고려. 민주시민교육센터 내 인 증 강사 정보를 공개하여, 강사 섭외가 필요한 기관·단체에 공개. 단, 이력사항 등록 및 관 리는 센터에서 시행하되, 신청 및 변경사항 관리는 강사가 직접 지행함
- 또한 센터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모든 강사는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道교육청과 연계하여 센터가 중등교사연수기관으로 등록 시, 교사 연수 프로그램으로 과 정 운영 가능

### 3 민주시민교육연구자

- 시민참여 연구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지역사회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참여 의 지를 북돋게 함. 공모사업 참여시 연구진 중 일정 인원 이상은 본 과정을 수료한 시민으로 한정하여,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함
- 또한 연구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민주시민교육 교재, 강사양성 과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함

## 1. 운영주체 선정 및 전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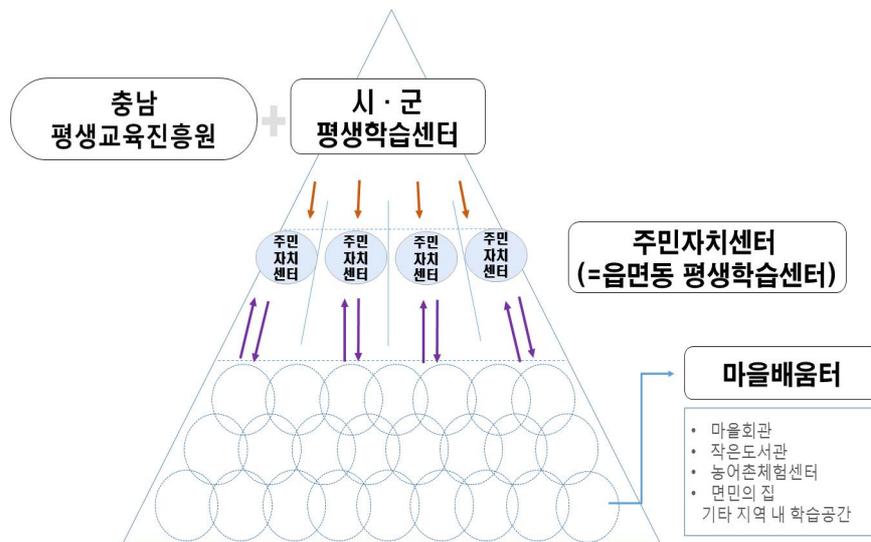
### 1) 충남 민주시민교육 운영주체

- 충남민주시민교육 운영주체는 첫째,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둘째, (가칭)충남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셋째, 민간단체 위탁설치 등을 들 수 있음.
- 첫째, 충남평생교육진흥원설치 방안은 초기 예산의 절감, 안정된 운영예산 조달, 인력의 최소화, 행정동원력이 장점이나 평생교육에 설치함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임.
- 둘째, (가칭)충남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방안은 설치근거를 위한 조례제정, 초기 상당한 예산의 투입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독립적 민주시민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셋째, 민간단체 위탁 설치 방안은 자율성,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으나, 단체의 성격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성 확보가 관건임.

### 2) 충남 민주시민교육 전달체계 구축

- 민주시민교육 전달체계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축되는 조직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축되는 조직의 성격을 달리하여 구성됨.
- 광역수준에서는 해당지역의 기본적인 민주시민교육정책에 대한 수립과 민주시민교육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정보종합시스템 구축, 운영 등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
- 기초수준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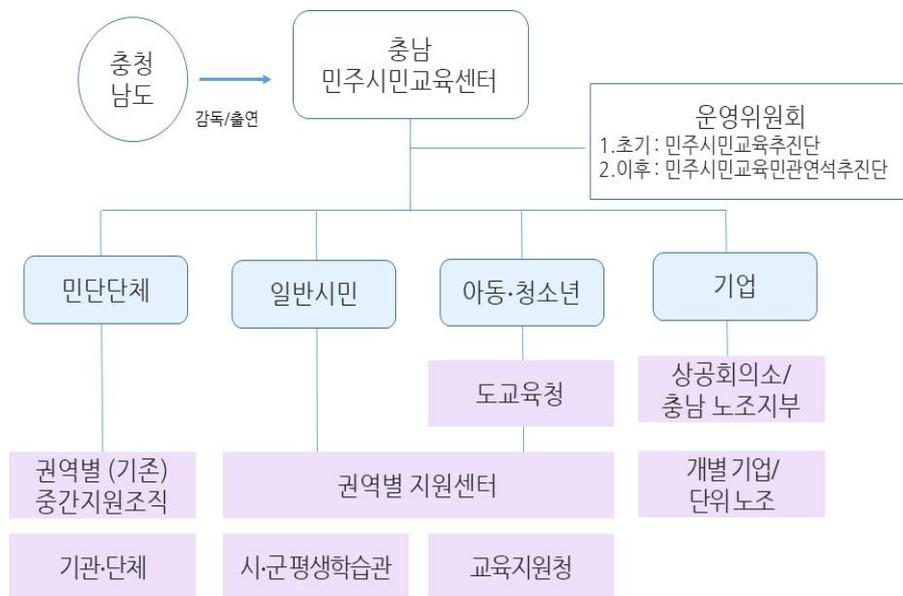
- 민주시민교육 전달체계는 시민의 학습권 보장과 사업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전략적으로 구상되어야 하며, 그 자체로 민주적이며 시민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직 시민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국가 수준의 민주시민교육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화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역의 상황에 맞게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평생교육차원에서 제도적 전달체계를 검토하며 평생학습도시(기초지자체) 및 평생학습센터(읍/면/동) 구축, 시/도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등으로 추진되어가고 있음(교육부, 2018)
  - 충남도 단위에서는 시/군 평생학습센터 → 주민자치센터 → 마을배움터로 평생학습전달체계를 구축해가고 있음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확대하고 지역 내 도서관,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등으로 마을배움터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평적 교육장면의 확대에 있음
- 둘째, 민주시민교육 역시 시민의 민주시민교육 학습권 보장의 차원에서 시민의 생활과 접근성을 고려한 차원의 전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평생학습전달체계의 경우 주거지를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터-학교 혹은 공간을 뛰어넘은 시민의 관심 영역이 어떻게 전달체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편임



[그림 5-1] 충남 평생학습전달체계

- 충남 민주시민교육 전달체계(안)은 학습자의 가정-학교-사회에서 시민성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시민, 아동·청소년, 민간단체, 기업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상됨
  - 일반시민과 아동·청소년의 경우 기존 평생학습전달체계 및 공교육전달체계를 활용하되 권역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민간단체는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존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복지 등의 중간지원조직을 민간단체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하여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의 경우 충남 상공회의소와 노조지부를 각각 민주시민교육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부여하여 개별 기업과 단위노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센터 활동의 심의협의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되 과도기 단계에는 민주시민교육추진단이 안정기 이후에는 민주시민교육 민관연석추진단을 운영위원회로 두어 민간의 참여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함



[그림 5-2] 충남 민주시민교육 전달체계(안)

## 2. 민주시민교육 지원조례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 서울, 경기, 세종, 전북, 전남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추진근거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충남도는 이러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충남도의 민주시민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시급함.
  - 조례 제정 후 충남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점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 민주시민교육을 지나

치게 협소하게 정의한 측면이 있어 향후 조례제정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남인순 의원안)에서 제시된 정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정의)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함.

### 3.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충남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제정 이전까지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을 민주시민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 기초 민주시민교육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시 필수이수과목으로 포함하는 방안 검토
- 도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전문강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강사 양성프로그램을 함께 개설할 필요가 있음.
  - 민주시민교육 강사는 국가자격과정이 없기 때문에 1, 2, 3급 강사과정을 개설하고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자격증을 부여토록 함.
  - 국가자격증인 평생교육사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강사 자격증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면, 단기간에 강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4. 자발적 도민참여 플랫폼 구축

- 민주시민교육이 일방적으로 개설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한계를 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형성하여 토론과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주제 선정, 참여자, 장소, 일시 등 학습모임의 운영 전반을 시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 환경을 조성함
- 학습공간 등의 지원은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참여 기관·단체에서 제공하거나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공유학습공간 공유로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참고> 참여를 통한 시민성 학습 사례

### ① 누구나정상회담 @ 대전

- 대전 지역 곳곳에서 동시에 열리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대화모임으로 시간과 장소, 형식과 규모에 제한 없이 대화주간 동안 누구든지 대화모임을 개최하고, 그 내용을 모두와 공유할 수 있음
- 시즌 1 주제 : '2018년,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들', 시즌 2 주제 : 주민 없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앙금없는 짬뽕

이름	주소	시간	주소
해동문 안스 빌딩	유유동	10:00	해동문 시청앞
한양대학교 학생회관 2층 201호	충정로	10:30	가동동 중앙시장앞
한양대학교 사립대학 본관 4층 401호	충정로	13:30	가동동 가동
한양대학교 사립대학 2층 201호	충정로	14:00	대동동 중앙시장앞
한양대학교 사립대학 1층 101호	충정로	16:00	안동동 중앙시장앞
한양대학교 사립대학 1층 102호	충정로	16:00	안동동 중앙시장앞
대전광역시 중구 가동동 100호 100호 100호	안동동	19:00	충정로 중앙시장
대전광역시 중구 가동동 100호 100호 100호	안동동	19:30	충정로 중앙시장
대전광역시 중구 가동동 100호 100호 100호	안동동	19:30	충정로 중앙시장

**누구나정상회담(대전)**  
 시민과 정치, 행정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한 대전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화모임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2018년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들'이라는 공통주제, 후속주제와 시민들의 참여에 6개월 대화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즌 2는 "모든 시민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예산을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즌 2는 "모든 시민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예산을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②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es)

- 마드리드 시민이라면 누구나 간단한 가입절차를 거친 후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음. 마드리드시 규정에 따라 유권자 2%(약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제안은 주민투표에 부치고,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입법 됨. '토론-제안-투표-결정'의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음

### ③ 공간을 공유한다, 시민을 위한 공간 플랫폼

-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누구나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 플랫폼으로 충남 시군 내 유휴공간을 발굴, 지정하여 지역 주민 가까운 거리에 쉽고, 다양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유된 학습 공간 사업



출처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공유로 홈페이지(<http://gong-uro.cile.or.kr/>)

## 5. 실천공동체 육성 및 지원

- 실천공동체란 공통의 관심 영역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실천과정에서의 학습을 통하여 관심영역에 대한 지식 및 전문성을 공유, 심화시켜 나가며 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혁신을 구축하는 사회적 학습과정
-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실천공동체란 충남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학습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지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실천을 도모하는 학습모임
- 민주주의와 관련된 구체적 과제를 가진 학습 모임 결성을 지원하고 공모사업 등을 통한 지원 및 실천활동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참고〉 실천공동체 사례

#### ①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센터 '시민 사회참여 모임 지원 사업(홍사단)

-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으로 동아리 당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시 거주재학·재직 시민 5인 이상

#### ②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 지원사업'

- 시민사회 과제해결 지원, 공익강좌 개설 지원, 공익활동 모임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시민 모임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

## 6. 충남 시민대학 체제 구축

- 민주시민교육을 시민대학 과정으로 운영하여, 다년간 교육과정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학습하고 시민학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인문교양 시민대학과정



[그림 5-3] 충남 시민대학 교과과정

출처 : 이다현·임현성(2017). 충남시민대학 실행계획 수립 연구

- 필수교양, 선택교양, 특별과정을 통해 지역과 사회에 대해 학습하고 논의를 지속시킬 수 있게 하며, 역사에 치중된 기존 충남학 교육과정을 보강하여 지역의 근/현대사 및 지역 경제, 사회, 정치 등의 논의를 추가하고 공동체적 관점의 실천 인문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함

〈표 5-1〉 충남 시민대학 학교별 역할

구분	조직 체계	주요 역할
충청남도 시민대학	본부 캠퍼스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전반 운영관리 및 공유학교 과정 운영
	온통 배움학교 (지자체, 대학 연계)	·마을학개론, 지역공동체, 민주시민론 등의 우리 지역 알기에 기반한 인문학 교양교육과정 ·공모를 통한 캠퍼스 인정 방식 채택
	온통 성장학교 (지자체, 대학, 단체 연계)	·충남의 시민으로서 시민성 강화 및 성장을 위한 인문사회학 기반 교육과정
	온통 공유학교	·충남이 공유하는 과제(사안) 등에 대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학습하고 공유하는 교육과정 ·전문가 역량 강화 및 심화과정

〈참고〉 시흥 아카데미



시흥아카데미 운영담당 조직체계

그림출처 : 시흥 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academy.siheung.go.kr/academy/web/index.do>)

시흥아카데미 학사 운영

그림출처 : 시흥 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academy.siheung.go.kr/academy/web/index.do>)

- 학교장 중심과정은 과정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 운영으로 원칙으로 하며, 전공분야는 분야별 성격에 따라 '꿈모작학부', '참살이학부', '교양학부' 3분야로 나눠서 운영함
- 수료 및 졸업자격은 총 교육시간(현장학습시간 포함)의 80%이상 출석을 원칙으로 하며, 꿈모작 및 참살이 학부의 전공 분야별 60학점 이상, 교양필수과목 20학점 이상, 자유선택 20학점 이상 수료하여 총100학점 이상 수료 시 졸업자격이 부여

## 7.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육성 및 활용

-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가는 교육 전반을 운영하는 기획자와 교수자로 양성될 필요가 있음.
-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는 민주시민교육사, 민주시민강사, 민주시민연구자 등으로 구분하여 육성하고 활용함.

구분	기능	활용
민주시민교육사	민주시민교육 기획 및 운영지원	학습동아리(실천공동체)형성, 민주시민교육공모사업, 프로그램기획/평가
민주시민강사	민주시민교수자로서 역량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강사활용, 강사등록관리시스템 등록
민주시민연구자	민주주의 기록 및 관리, 연구	민주시민교육컨텐츠 개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8. 민주시민교육의 적정 명칭

- 각국의 역사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시민교육’, ‘정치교육’, ‘공민교육’, ‘공존교육’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독일 : 정치교육(보편적 시민교육, 보이텔스바흐)
  - 미국 : 시민교육(헌법적 가치의 이해증진, 시민교육센터, 다양한 사회단체 중심 자율실시)
  - 스웨덴 : 시민교육(독립성이 보장된 시민교육위원회 중심)
- 충남의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의 목표 내지 헌법적 가치 실현이라는 지향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이라는 명칭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9.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목차(안)

- 충남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현재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비롯하여, 주로 교육청 단위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그러나 충남은 조례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종합계획 수립근거가 미약하지만, 조례제정에 대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 제시된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목표 및 기본방향
2.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계획
3. 민주시민교육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
4. 제13조에 따른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재 및 매체활용에 관한 사항
7. 민주시민교육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8.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각 부처·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충남도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는 법률안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목차(안)를 제시코자 함.

- I.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 배경 및 필요성
  2. 계획수립 목적
  3. 계획수립 범위 및 방법
- II.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배경
  1.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2.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3.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 III. 국내외 민주시민교육 사례 분석
  1. 국외 사례(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2. 국내 사례(서울시, 경기도 등)
  3. 시사점
- IV. 충남도 민주시민교육 실태분석
  1. 충남도 민주시민교육의 제도분석
  2. 충남도 민주시민교육 추진실태(프로그램, 공공/민간/학교 등)

3. 시사점

**V. 기본구상 및 추진과제**

1. 기본구상

- 1) 비전 및 목표
- 2) 기본방향

2. 추진과제

- 1) 충남민주시민교육 기반조성
- 2)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 양성방안
- 3) 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 설립방안
- 4) 민주시민교육 조사 및 평가
- 5) 충남민주시민교육 지원시스템 확립

**VI. 집행 및 관리계획**

1. 행재정적 계획

2. 운영계획(거버넌스체계 구축 등)

## 06 결론 및 정책제언

### 1. 결론

-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이라 정의할고 할 수 있음.
-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①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치·역사 및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 ②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참여 및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 ③민주적 토론방식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훈련 ④ 그 밖에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실천을 위한 모든 교육이라 할 수 있음.
- 1997년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주도한 2010년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 시민교육활성화위원회에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19대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현재 소관위에 접수중임.
-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세종시, 성남시, 안양시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기교육청, 충북교육청, 전북교육청, 전남교육청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였음.
- 외국의 민주시민교육은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 시민교육, 시민성 교육, 공민교육 등으로 사용 되고 있으나, 목표나 내용은 대동소이함.
- 우리 나라에서는 통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민간차원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주도하고 있음.

- 충청남도와 산하기관, 출연기관에서 운영중인 도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자치교육, 다문화교육, 사회적경제, 장애인교육, 성평등/성주류화/성인지교육, 자원봉사교육, 문해교육, 행복학습, 시민배움터 등은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은 도정영역별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교육내용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
-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의 비전 및 목표는 가칭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거쳐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함.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마그데부르크선언(Magdeburger)을 참조하여 그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의 추진과제로 민주시민교육의 운영주체 선정 및 전달체계 구축,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자발적 도민참여 플랫폼 구축, 실천공동체 육성 및 지원, 충남시민대학 체제 구축, 민주시민교육강사 육성 및 활용 등이 필요함.
- 도민교육프로그램들과 연계운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도차원의 기획단 구성,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도민교육프로그램개설시 민주시민교육과정의 의무 편성,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도와 시군차원의 표준교재 제작, 민주시민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충청남도에서는 일반도민, 강사,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학생 등 대상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문교양, 민주주의, 평등, 공동체, 지방자치, 다문화, 통일, 사회봉사, 역사, 정치, 환경, 성인지, 인권 등 교육주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2. 정책제언

-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최소기준 합의
  -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이며, 시민들에게 어떻게 교수-학습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임.
  - 독일의 정치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보이텔스바흐 협정’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이 적어도 어떠한 형태와 내용이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최소한의 합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충남의 학교나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함께 누가 중심이 되어 어떻게 민주시민성을 길어낼 것인가라는 문제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논란과 쟁점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충남의 학교와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적 시민성과 개념, 교육내용, 교수방법, 교육의 결과에 대한 합의를 할 필요성이 있음.
- 구체적인 내용 수준의 합의와 결정은 할 수 없겠지만, 학교와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는 합의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시민사회간 민주시민교육의 최소 기준을 합의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원칙의 명료화

- 민주주의의 이상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실천에 대한 합의를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적인 수준에서나 집단적 수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정치적 참여에 큰 비중을 두고 정치적으로 각성된 시민을 길어야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학교와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확인하여 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원칙이 마련되어야 함.
- 이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최소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형식,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해야 함.

### ● 셋째, 민주시민교육 추진근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종합계획 수립

- 충남도와 시군,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목표, 교육대상 및 주제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 넷째, 조례제정이전에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을 민주시민교육 운영주체로 활용

- 충남민주시민교육 운영주체는 (가칭) ‘충남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되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제정 이전 과도기적 운영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이 담당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장점이 있음.
-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 주체로 참여할 경우, 초기 예산의 절감, 안정된 운영예산 조달, 인력의 최소화, 행정동원력이 장점이 될 수 있으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음.
- 도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전문강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강사 양성프로그램을 함께 개설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민주시민교육 전달체계는 광역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정립

- 충청도 민주시민교육의 전달체계는 충남의 기본적인 민주시민교육정책 수립과 민주시민교육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정보종합시스템 구축, 운영 등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가칭)충남민주시민교육센터 등이 운영주체로 참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 및 충남 평생학습전달체계를 준용함.
- 도민과 아동/청소년은 평생학습전달체계/공교육전달체계 활용하되 권역별 지원센터 설치하여 지원, 민간단체는 중간지원조직 지정, 기업은 충남상공회의소와 노조지부에 역할 부여함.,

● 여섯째, 자발적 도민참여 플랫폼 구축 및 추진

- 민주시민교육이 운영주체에서 일방적으로 개설되는 교육프로그램의 한계를 넘고,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형성하여 토론과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민 스스로 운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함.
- 학습공간은 민주시민네트워크 참여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시군의 경우는 공공기관 및 커뮤니티센터 공간 등을 활용함.

● 일곱째, 도민의 민주성 함양을 위한 유능한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및 활용

- 도민의 민주성 함양을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사, 학생 및 도민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가르치는 민주시민교육강사,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재개발을 담당하는 민주시민교육연구자를 양성하고 활용함.
-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민간단체 등에 배치하

여 각각의 역할을 수행함.

● **여덟째, 민주시민교육 실천공동체 육성 및 지원**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지속적 교류 및 실천과정에서의 학습을 통해 관심영역에 대한 지식 및 전문성을 공유,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실천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함.
- 충남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학습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지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실천을 도모할 수 있음.

● **아홉째, 기타**

- 충남시민대학 체제를 구축하여 민주시민교육 학습
- 민주시민교육의 명칭은 ‘민주시민교육’ 이 적정함.
-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목차(안) 제시

- 강영혜 외, 201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 2011-09. 한국교육개발원)
- 강원택·김종범, 2011. 민주시민교육의 정치학적 접근과 정치학 교육. 2011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4. 22.
- 경기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외, 2014.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고등학교 창의지성).
-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2016. 민주주의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2016년 교육정책연구보고서.
- 국회의원 남인순,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2017.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
- 김성수, 2015. 학교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113.
- 문성근, 2015. 서울시민주시민교육 추진 현황 및 전망. 서울시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크숍자료에서 참고.
- 박재창 외 공저, 2007. 민주시민교육의 전략과 과제, 서울:도서출판 오름.
-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2017. 2017년 연간사업보고서, 34.
- 서울시교육청, 2015. 2015학년도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 송두범·강수현, 2017. 민주시민교육 실행방안. 현안과제 연구. 충남연구원.
- 선거실(법제과), 2011. 외국의 민주시민정치교육 실시현황. 해외통신원 지정과제. 제2011-4호.
- 신형식, 2012.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제2호
- 심익섭, 2004. “독일정치교육 조직체계에 관한 연구: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9호, 281-305.
- 유석열, 1986.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한국정치교육의 방향”. 한국정치학회보, 제20집 제2호.
- 음선필, 2013. 민주시민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글로벌법제전략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이다현·임현성, 2017. 충남시민대학 실행계획 수립 연구
- 이범용, 2015. 한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발전방향 모색.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제 49집, 33-65.
- 이병익 외, 2008. 민주시민교육 핵심역량 실천모형 개발. 서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p.170.
- 정창화, 2004.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심익섭 외(편). 『한국민주시민교육론』. 엠에드.
- 조찬래, 2012.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제2호.
- 최성환 외, 2018.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길. 이슈&진단, No.319. 경기연구원.
- 홍윤기, 2015. 서울시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중간보고/시민공청회 용도 보완)
- 선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civicedu.go.kr/>)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공유로 홈페이지(<http://gong-uro.cile.or.kr/>)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http://www.makehope.org/>)